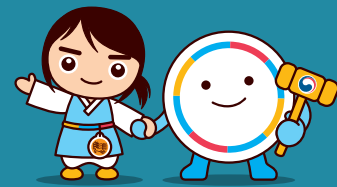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은 청렴 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vol.74





독자의 소리

지난 2022년 <여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최미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익포커스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원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어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데이터를 통해 모두가 체감하는 불편과 고충이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드네요.

박인숙(강원도 태백시)

권익빅데이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월부터 운전자의 횡단 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7월의 키워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유익했어요!

최지만(광주광역시 동구)

권익을 빛는 사람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고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복지만큼, 부정도 밝혀내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은 억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규제의 점검·정비를 통해 반부패 법·정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제도개선, 고충민원, 규제개선, 적극행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호 정답 110 또는 1398

퀴즈 정답자 김성아(울산광역시 중구) 서애숙(충청남도 보령시)
김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차수정(광주광역시 광산구)
박재욱(서울특별시 도봉구) 홍경석(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영희(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열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ACRC NEWSLETTER

VOL.74

국민을 위한

04	권익 포커스	한국계 참전용사 참전 사실 확인 고충 민원 해결
08	정의의 러, 국민권익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 행정심판
14	권익 미리보기	규제혁신
18	권익 빅데이터	2022년 9월 민원동향
24	ACRC 뉴스	분기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28	권익 게시판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이 만드는

29	권익 새로고침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
34	권익을 빛는 사람들	국민권익위원회 신입직원을 만나다
36	국민생각함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38	권익 TOON	손실보상 배제?! 너무나 부당합니다!
40	청렴 콘텐츠	라떼의 전설

국민과 함께 읽는

44	권익 나들이	변산반도 빛 여행
50	권익 비전	국민권익 다함께 누리쇼 5
52	권익 스크린	청렴VS부패, 부패와의 전쟁
54	트렌드 이슈	미술품 투자,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56	생활 더하기	지긋지긋한 알레르기비염, 이제 그만
58	권익 갈무리	다시 읽는 국민권익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전현희 편집인 허재우 정무간행물 발간번호 11-1140100-000203-0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naver.com/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크㈜

한국계 참전용사 참전 사실 확인 고충 민원 해결

한국계 참전용사 예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 5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들은 조지아주 거주 한국계 참전용사들이
미국 참전용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마움을 담은 하원 결의안을 전달했다.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방문 개요

조지아주에서 한국계 참전용사
운전면허증 등에 참전용사 표식 부여
법안이 통과되면서 교민들이 참전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제기('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47명에 대한
참전 사실을 확인,
이에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 인사 전달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참전용사의 고충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참전용사 예우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베레랑' 표식과 성조기를 새긴 참전용사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상이 기존의 '미군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자'에서 '미군의 동맹군으로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참전한 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최초로 한인들도 미국 참전용사에게 주어지는 예우와 대형식품점 할인, 우대이율 적용 등 각종 보훈 혜택 일부를 받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참전용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 정부의 참전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또한, 규정상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어려웠다. 더욱이 40여 년 전에 고국을 떠나 어느덧 90세 가까운 노년이 된 참전용사들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친인척이나 지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 신청을 하려고 해도, 여러 소관 부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전 사실 확인을 시도했던 한인 참전용사들은 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기관 협조와 자료 확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지원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의 군 복무와 참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과거에는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되어 군 복무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례가 많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참전용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병무청, 경찰청 등에 협조를 요청해 군 복무 기록과 참전 유공자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군번을 찾았다. 덕분에 총 5회에 걸쳐 47명이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미국 조지아주로부터 '베레랑' 표식과 성조기를 새긴 참전용사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번호판 등의 예우를 받게 되었다.



참전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이찬필(Peter C Lee)씨는 “재정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직접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인연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친절하게 참전 기간이 수록된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받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고국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잊힌 참전 기록을 꺼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인장을 찍어 보내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없었다면 생전에 얻을 수 없는 영광이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미국 조지아주 의회에서 한인 참전용사들의 고충을 해결해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9월 30일에는 미국 조지아주 에디 하비슨(Eddie Harbison) 상원 의원과 빌 히친스(William Hitchens Jr) 하원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만나 감사를 표하는 하원 결의안을 전달했다. 두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미국 최초로 외국 출신 참전용사들이 미국 참전용사로 예우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주역이다. 현재도 다른 주에서는 미군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했을 경우에만 이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고국을 떠난 한인 참전용사들이 미국에서도 예우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두 분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빌 히친스 하원 의원은 “나는 미국 해병으로 복무하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한인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를 전장에서 직접 지켜보았다”고 말하며, “한인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릴 수 있도록 도와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인사를 전했다.

결의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로를 인정하고 기리는 바입니다. 초기 한인 사회의 구성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0년 8월 4일 조지아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HB 819 시행 이후, 약 150명의 참전용사는 운전면허증에 베테랑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SB 225가 법적 검토를 거쳐 발효된 이후, 약 120명 이상의 참전용사들은 베테랑임을 나타내는 특별 제작된 차량 번호판을 달고 조지아주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한인들의 청원과 추진으로 발효된 조지아주 최초의 입법 개정안으로,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군으로 참전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했고, 대한민국의 경우 영문 병적 증명서가 이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많은 참전용사가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전용사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경찰청, 육군본부 등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참전용사들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인 동맹국 참전용사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합당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인 참전용사를 위한 뛰어난 공로를 인정하고 기리는 것을 결의하며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빌 히친스 16지구 하원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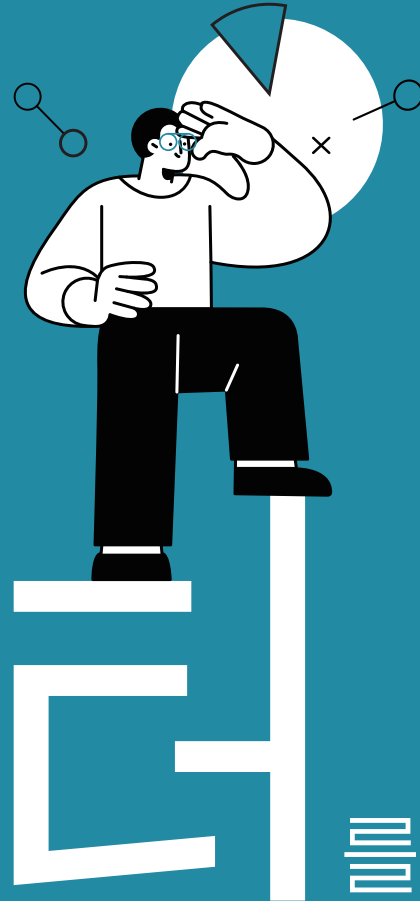
① 신속·공정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습니다

② 넓은 구제의 폭으로 더 많은
국민의 권익을 지킵니다

③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입니다

④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행정심판 주요사례



정의의 리를 다지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 행정심판

행정심판이 있기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또한, 간단한 절차와 넓은 구제의 폭, 여기에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01 신속·공정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습니다

행정심판 역할 및 특징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며, 국민은 행정심판을 통해 무료로 신속·공정하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의 장점

1 # 별도 비용 없이 간편·신속하게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2 # 국선대리인을 선임 지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 조정을 통한 상호 Win-Win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조정 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 모두 Win-Win할 수 있다.

4 # 인용재결 시 불복 불가

청구를 받아들이는(인용)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불가]

※ 반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재결이 있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INFO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3가지가 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또한, 행정심판은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02 넓은 구제의 폭으로 더 많은 국민의 권익을 지킵니다

행정심판 대상

현재 행정은 거의 모든 국민생활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위법·부당한 행정권 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이에 행정심판은 전방위적인 구제의 폭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 대상 예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

- 1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03 경제적 지원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예산 범위 내 1건당 50만 원 이내

국선대리인 신청 전 유의사항

- 1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다.
※ 단,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시 제출은 가능
-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다.
-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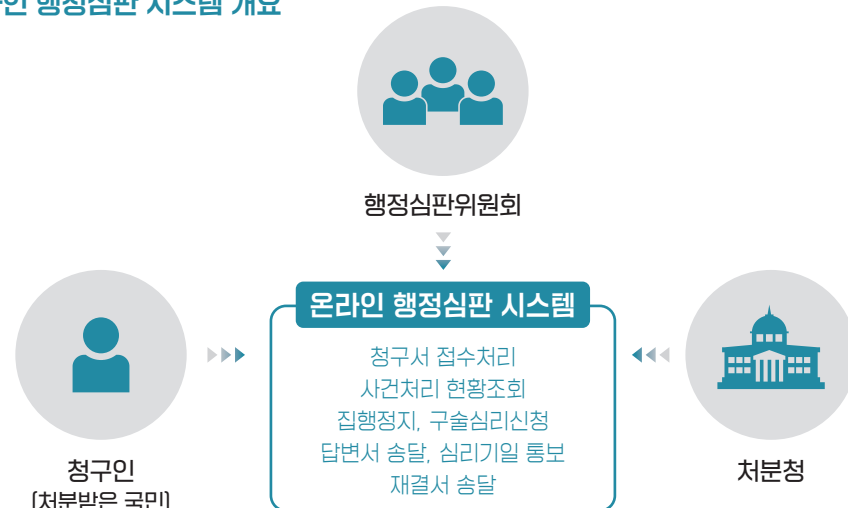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04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요



온라인 행정심판 특징 및 장점



PC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도 쉽게 행정
심판 청구 및 확인 가능



수수료 면제



빠른 처리 절차



지식서비스 이용으로
유사한 재결 검색·활용

05 행정심판 주요사례



사례1) 당신은 국가유공자가 맞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참전용사 #베트남전 #고엽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인은 1971년 베트남전에 파병된 참전용사다. 그는 전역 후 고엽제 후유증이 나타나 고생을 하다 2020년에 전상군경으로 등록됐다. 그런데 민원인이 군에 입대하기 2년 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원과 보훈청은 민원인을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보훈급여금 등을 반납하도록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원인의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했고, 관련법과 규정, 판례등 유사한 사례를 찾았다. 그 결과,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베트남전 참전 이후가 아닌 군 입대하기 이전의 과오로, 형기를 마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후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이후 고엽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례2)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안장신청 #병적기록 재심의

고령의 참전 유공자 최 씨는 자신이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희망하며 안장신청을 하였지만 군 생활 중 2년 간 탈영을 했다는 병적 기록이 확인되어 안장신청을 거부당했다. 최 씨는 약 60년 전 군 복무 휴가 중 질병으로 약 20여 일 늦게 부대 복귀를 한 것이 2년 이상의 탈영으로 잘못 기록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 씨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병적기록 재심의, 재조사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재심의 끝에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 국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여러분이 더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더 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불편·부담은 낮추고 국민 삶의 질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규·제·혁·신



규제혁신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은 억제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기업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규제의 점검·정비를 통해 반부패 법·정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제도개선, 고충민원, 규제심판, 적극행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툴을 적극 활용하여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2022

01

02

03

펼쳐서 미리보기 ↓

INFO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혁신 추진방향

- 하나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집중 발굴
- 둘 국민 접점에서 정부 내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
- 셋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행정심판 등으로 규제민원·규제처분 적극 해소
- 넷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확산

불편·부담은 낮추고
국민 삶의 질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규·제·혁·신



규제혁신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은 억제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기업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규제의
점검·정비를 통해 반부패 법·정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제도개선, 고충민원, 규제심판,
적극행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틀을 적극 활용하여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주요사례

01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집중 발굴

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제한 대상 확인서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

- 기존** 공공기관 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계약제한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인 기업으로부터 예외 없이 받도록 운영
- 개선** 국가·지방계약법령 상 수계약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의무를 면제

02 국민 접점에서 정부 내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

[진행중] '국가자격 시험 관련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현행** 공직경력을 인정하는 특례제도가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청년층 등에게 불공정·진입규제 요소로 작용
- 개선** '공정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자격 시험 특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03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행정심판 등으로 규제민원·규제처분 적극 해소

'자산매입 후 임대'시 합리적인 자산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 기존** 유동성 위기 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산 매입 후 임대'제도를 신청한 기업이 해당 자산을 재매입 하는 경우 환매가격 산정방식(기준)이 불명확
- 개선** 환매가격 산정 시 가치평가 비교 대상 자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조건에 환매가격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등 환매가격 산정방식의 개선을 권고

04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확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통해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증빙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 외국어 번역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

- 기존** 건설기술인 경력(근무처, 학력 등) 신고 시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증명서류 중 한국어로 번역되어 공증된 서류만 증빙자료로 인정
- 개선**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고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법령에 따라 번역하면 인정

*아포스티유 확인서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발행 국가의 유권 당국(법무부, 외교부)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협약국(중국, 캐나다, 사우디 등 일부국가만 비협약)이 이를 인정

TIP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부담을 해결하는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규제건의'란과 지방 '규제개혁신문고'란을 통해 규제에 관한 건의 사항 신청해주세요.

PART 1 국민, 기업 누구나! 규제건의

국민, 기업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공간입니다.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PART 2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지방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나 해당지역 주민·기업 등의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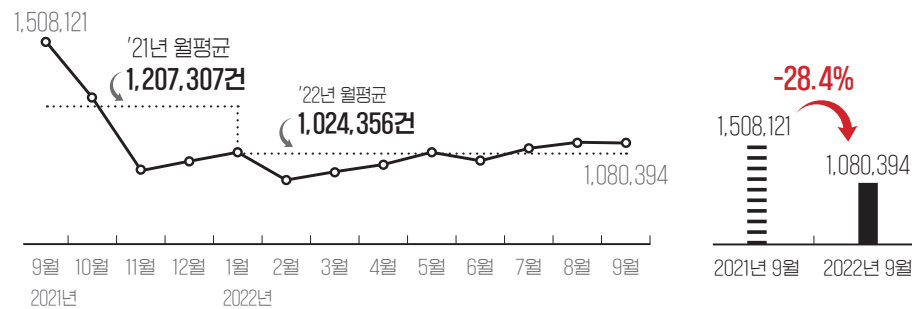
※ 지자체 규제개혁담당관이 아닌 경우 규제건의 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9월 민원동향'을 살펴며, 국민이 바라는 내일을 그려본다.

- **민원 추이**
- + 2022년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0,394건
 - + 전월(1,078,588건) 대비 0.2% 증가
 - + 전년 동월(1,508,121건) 대비 28.4% 감소
 -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10.4. 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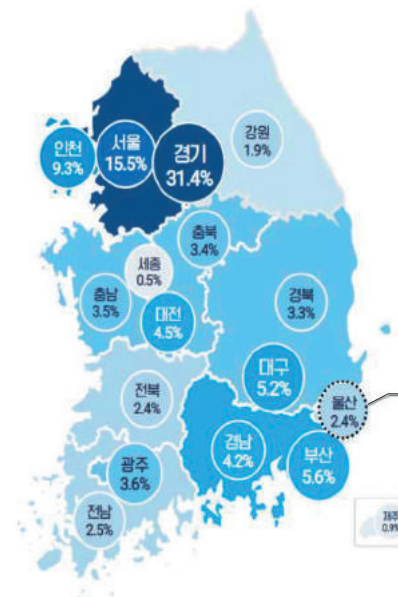


- **신청인 현황**
- + 연령별로는 40대(32.6%) 및 30대(26.8%), 성별로는 남성(69.6%)이 다수를 차지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1.7%), 30대 남성(18.2%), 50대 남성(14.6%) 등의 순
 -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11,628건 대상

연령별	20대 이하	12.0%	성별	남성	69.6%	연령별·성별	40대 남성	21.7%
	30대	26.8%		여성	30.4%		30대 남성	18.2%
	40대	32.6%					50대 남성	14.6%
	50대	19.2%					40대 여성	10.9%
	60대 이상	9.4%					30대 여성	8.6%

- **지역별 현황**
- + 경기 31.4%(291,807건), 서울 15.5%(143,823건), 인천 9.3%(86,245건), 부산 5.6%(52,039건), 대구 5.2%(47,879건) 등 순으로
 - 수도권이 전체의 56.2% 차지
 - + 교통법규 위반 및 태풍피해 신고 등 울산광역시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 (12.1% ↑). 울산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8,588건)

9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울산광역시 주요 민원 키워드

과대료 처분
불법 현수막
전기차 충전구역
중랑선 침범
아파트 조망권
이설 요구
신로 위반
불법주차
가로등 고장
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아파트 높이
운동지구 송전탑
원단보도 통행방해

울산광역시 민원발생 현황



※ 신청지역이 확인된 928,678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 분야별 현황

- +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50.7%)**가 가장 많고, **교통(8.9%)**, **도로(8.4%)**, **환경·행정안전(6.1%)**, **주택건축(2.9%)**, **산업통상(1.9%)**, **보건(1.7%)** 분야 등의 순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교통	도로	환경	행정 안전	주택 건축	산업 통상	보건	교육
50.7%	8.9%	8.4%	6.1%	6.1%	2.9%	1.9%	1.7%	1.4%
수자원	문화	방송 통신	관광	노동	도시	국방	재정	체육
1.4%	1.2%	0.9%	0.9%	0.8%	0.7%	0.7%	0.7%	0.6%
농림 축산	과학 기술	법무	세무	해양 수산	사법	복지	외무 통일	우정
0.6%	0.6%	0.5%	0.5%	0.4%	0.4%	0.4%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37,585건 대상

증가율 상위 분야

※ 서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등 환경 분야 증가



환경
69.0% ▲



경찰
34.4% ▲



보건
13.6% ▲



교육
10.2% ▲



행정안전
9.2% ▲

감소율 상위 분야



교통
50.6% ▼



해양수산
37.3% ▼



도로
34.0% ▼



수자원
31.0% ▼



사법
26.7% ▼

■ 주요
민원키워드

+ 9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경의중앙선 향동역**, **마포구 소각장** 등

+ 서울 접근성, 광역교통사업, 대중교통 이용, 교통 편익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 관련

■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 신설 요구, 인천 검단신도시 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역사 확정 요청 등 ‘교통환경’ 관련

■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건립 반대 등 ‘지역 내 기피시설’ 관련

■ 위례 경관개선사업 관련, ‘위례신도시 상징물’ 설치 요청

Top 30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복합쇼핑몰 계획	21	위례상징 조형물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	원당지구 인구	22	위례 경관개선사업
3	경의중앙선 향동역	13	대중교통 이용	23	전기차 충전구역
4	서울 접근성	14	인천 지하철	24	입지 선정
5	광역교통사업	15	어린이 보호구역	25	주민 영향
6	정차역 환승센터	16	신도시 주민	26	자원회수시설 선정
7	수도권 서북부지역	17	혐오시설	27	대기오염
8	마포구 소각장	18	버스노선	28	주거 만족도
9	인구 밀집도	19	교통 편익	29	경유차 매연
10	서울 중심	20	신설 결사반대	30	물류센터 건립

※ Top 30 이탈 키워드(전월대비)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소각장 폐쇄, GTX 예산, 김포 골드라인 등 11개

9월 월간 민원 분석,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싶다면?



10월의 관심키워드 : 산업재해

휴일이 많고 연말이 다가오는 10월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및 관련법 질의 등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예보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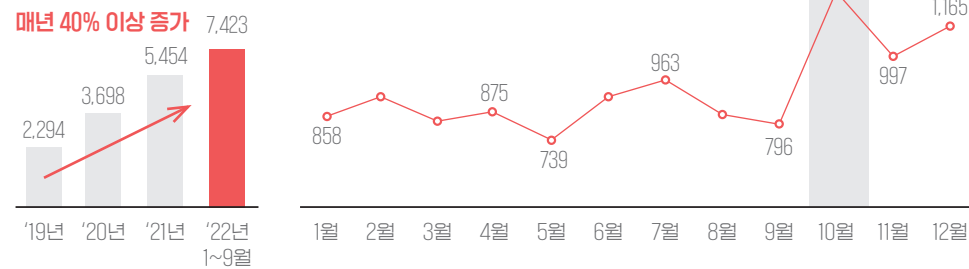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7~'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3,880명으로, 10월에만 356명 사망 [월평균 사망자 323명 대비 10% 이상 증가] [출처 : 고용노동부]

1 민원 추이

최근 3년 9개월간('19.1월~'22.9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8,869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 '22년 1~9월간 민원은 '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19~'22년 민원추이]

[최근 3년('19~'21)간 월별 누적민원 추이]



2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84.0%)이 여성(16.0%) 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8.1%), 40대(31.1%), 50대(13.6%), 20대(13.2%), 60대(3.5%)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3,321건(전체의 70.6%),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2,455건(전체의 66.0%)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25.9%), 서울(21.8%), 충남(7.7%), 부산(6.5%)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8,711건(전체의 99.2%)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3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77.5%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14.6%, 지방자치단체 7.0%, 시도교육청 0.9% 등의 순

4 민원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개인 보호구 미착용, 작업장 안전 통로 미확보, 온갖 폐기물로 인한 작업자 통행 방해 등으로 작업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2.9월, 고용노동부]
- 얼마 전 사고가 났던 건설장인데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전거리 없이 2대의 크레인을 동시 사용하며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자 한 명이 높은 구조물에서 혼자 작업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22.8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법 적용 질의]

- 현재 증축공사를 진행 중인 제조업체입니다. 공사를 발주하여 도급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은 도급사에서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도급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한 저희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나요? ['22.8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심사 지연불만]

- 전동킥보드로 배달 알바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는 게 없다고 그냥 병원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산재처리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사고 후 며칠 이내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2.7월, 근로복지공단]
- 10년 다니던 직장에서 다쳐서 무릎 수술 후 3월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 담당자께 전화하니 앞으로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고, 아직 직장에 실사도 안 나가셨다고 합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생활비도 바닥났고, 노모를 모시고 월세 내고 있는지라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22.6월, 근로복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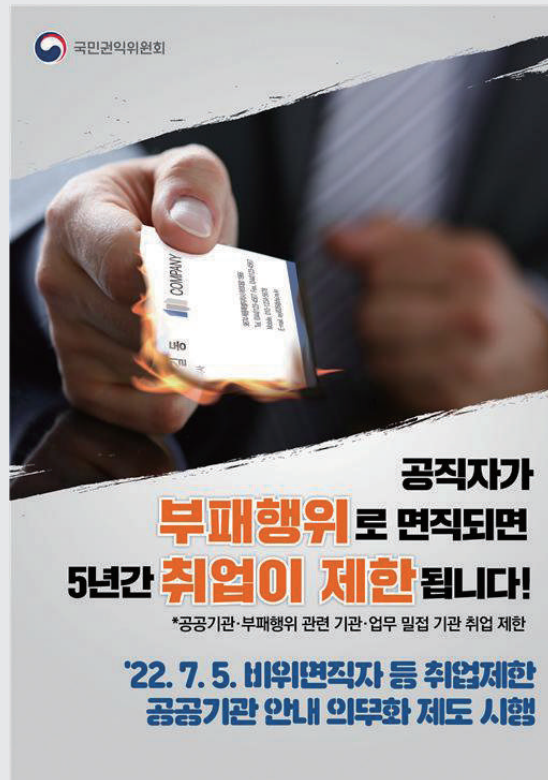
[산업재해 관련 피해 신고]

- 부모님께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산재에 해당되지 않으니 생각도 말라며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산재처리를 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8월, 근로복지공단]

ACRC NEWS

202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와 정책 이야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제도 시행



공직자, 부패행위로 인한 면직 시 5년간 공공기관·부패행위 관련 기관·업무 밀접 기관 취업 제한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로써,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에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됐다.



공공기관 청렴 역량 강화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 운영

[청렴윤리경영 교육 운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 및 반부패 규범 정착]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지난 8월 8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18회의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청렴연수원은 올 상반기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과 표준강의안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3개의 맞춤형 청렴윤리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임원 등 고위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고위직 과정' ▲교통·안전·개발 및 인사·예산 등 분야별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유형별 과정' ▲윤리경영 및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등이다. 앞으로도 청렴연수원은 지리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청렴연수원 방문이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총 14회 운영해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본격 시행

[부패행위 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및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구조금 지급 확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부패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확대된 책임감면 범위로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 감면받는다. 더불어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인도네시아와 공유

[인도네시아 국가행정관료개혁부 차관, 내무부 정보센터장 등 대표단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디아 나탈리사(Diah Natalisa) 인도네시아 국가행정관료개혁부 공공서비스 차관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이는 2019년 개발협력사업으로 기존 민원시스템과 각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합한 국민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디아 나탈리사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차관은 “한국은 짧은 기간에 많은 개혁을 이룬 국가이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국민신문고와 같이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구축시스템 운영을 위해 배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지난 8월,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렴도 측정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는

- ▲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60%)
- ▲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
- ▲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10%+α)로 구성됐다. 청렴체감도 측정은 전화 또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11월까지 이루어진다. 한편 청렴노력도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11월에 제출받아 내년 1월까지 실시하며, 부패실태 평가까지 종합 합산한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3년 1월 중 1~5등급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고충민원 의결서, 조정·합의서 결정문 개방

[결정문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문서 활용성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결정문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해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개방 데이터는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웹문서(HTML)와 오픈API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포털, 위원회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를 개방했다. 개방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문은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민원 발생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성한 가로수 교통안전 위협’ 전국 일괄 정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음부즈만이 전국 시·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교통안전 위협하는 도로변 가로수와 잡목을 일괄 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구와 관할 경찰서 간의 소통 및 관심 부족으로 교통안전과 연계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전국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는 지난 7월,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신호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가로수와 잡목을 일제 조사해 219개 시·군·구 지역에서 3,355개의 정비대상 수목을 선정했으며, 오는 10월까지 가지치기, 수목 제거·이설, 교통안전표지 이설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민원상담 한 곳에서 한 번에

정 부 합 동 민 원 센 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민원의 종류나 처리기관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민원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01 | 방문상담

상담 신청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실 방문
상담관 지정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상담 진행	신청인과 대면 또는 화상상담 진행
상담 종료	답변 및 대안·해결방안 제시 필요시 민원으로 접수하여 소관기관 이송
방문 주소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02 | 예약상담

예약 신청	홈페이지 예약 신청(www.counseling.go.kr)
상담관 지정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사전 조사	사실관계 사전 조사
센터 방문	예약일시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상담 진행	신청인과 대면 또는 화상상담 진행
상담 종료	답변 및 대안·해결방안 제시 필요시 민원으로 접수하여 소관기관 이송

03 | 온라인 상담

상담 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신청’
상담관 지정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사실 확인·자료 조사	상담 내용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확인	‘국민신문고’에서 결과 확인

04 | 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

365일 24시간
국민콜 110



전화상담



문자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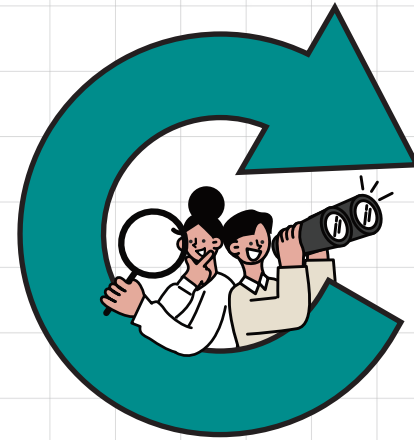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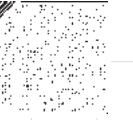
카카오톡 상담

①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②

공익사업으로 40년간 도로에 포함된
토지와 주택을 매수해주세요!



새로고침

국민의 목소리 권익의 길이 되다

국민의 목소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성심성의껏 답하기 위한 다양한 고충민원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충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부당한 처우의 새로고침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①

전입신고 3일 지연에 따른
출산지원금 미지급 관련 지급 요구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개월 전 이사를 계획한 민원인이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조례의 지급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원인은 불편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사한 지역에서 출산하여 아이를 키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인해 4주 이상 일찍 기존 거주지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단지 전입신고 3일 차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개선해주세요!

♀♀



이사한 지역(00시)의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전후 사정을 고려한 적극 행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이사계약서를
확인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부터 민원인의 가족이
이사할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진단서를 참고하여, 민원인이 출산예정일로부터
4주 이상 이른 시기, 즉 전입신고를 3일 앞두고(이사는 2일)
출산했음을 확인했다. 조산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었다면 충분히 이사한 후에 이사한 지역에서 출산을 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민원인이 이사한 지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기존 거주지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한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사한
지역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시사점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제도 관련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 향후
전국 실태조사를 통한 출산·양육 관련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필 것이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택과 대지 매수 문제 해소

공익사업으로 40년간 도로에 포함된 토지와 주택을 매수해주세요!

1983년에 시행한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토지와 주택 일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하고 40년간 거주했다.
소유자가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던 중 2018년 신청인 토지 및 주택에 근접하여 새로운 도로선형 개선사업이 추진됐고, 신청인은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주택과 대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을 제기했다.

〇〇

주택이 도로와 붙어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해 불편했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아 불편함을 감내하며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통량이 증가했고, 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소음과 먼지 등이 발생하여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

현장 실지조사를 통한 문제 해결

2018년 신청인 토지 및 주택에 근접하여 새로운 도로선형 개선사업이 추진됐다. 신청인은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주택과 대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만 설치해 줄 수 있고, 교통이 두절된 것이 아니므로 주택을 매수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한 상황이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내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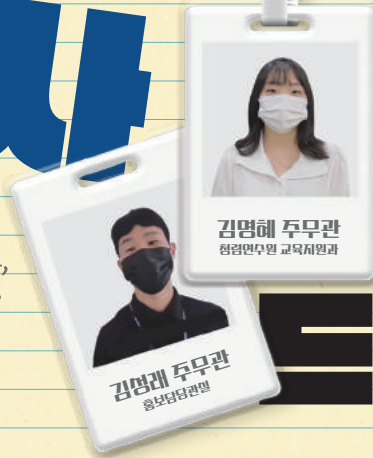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택 앞면 일부가 도로구역 안에 있고, 인근 지역에 시멘트공장과 다수의 석산이 있어 25톤 덤프트럭이 수시로 통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재 주택 소음도가 이미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앞으로 도로선형이 개선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예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후행 사업시행자가 주택과 대지를 매수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시사점

해당 사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익 구제에 기여한 선례가 되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 설 것이다.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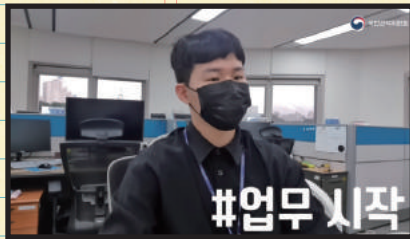
메모하고,
메모하고,
또 메모하기!



우리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신입직원

드림니다!

김성래 주무관



Play

지난 4월 임용된 김성래 주무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꼭 한번 근무해보고 싶은 곳이었다. 대학교 선배는 물론 동기들로부터 '좋은 곳'이라는 추천을 자주 받았던 까닭이다. 실제로 발령 이후 소속 부서인 홍보담당관실을 비롯한 권익위 선배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빠르게 조직에 적응 중이다. 현재 맡은 업무는 권익위에서 해결한 고충민원과 각종 사업을 미디어 등지를 통해 널리 알리는 일이다. 홍보담당관실 업무 특성상 유연하고 발 빠른 대처는 필수.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기도 했지만, 그를 아끼는 선배들의 조언과 배려 덕분에 매일 성장해가고 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장님을 포함해 홍보담당관실 구성원 모두가 출장이 잦아요. 현장 조정을 나가서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고, 기사를 만나 권익위의 상황 설명도 하고요. 이곳에 온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사이 완전한 '권익위 홍보맨'이 된 김성래 주무관은 마지막까지 권익위 소개를 잊지 않는다. 법과 규정상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라도 권익위 신문고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의 문을 두드리면 길이 열린다는 것! 믿음직한 새내기 덕분에 권익위의 앞날이 새삼 환하게 느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에 2022년 신입직원이 들어왔다. MZ세대의 당당함과 젊음의 열정으로 무장한 신입직원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새내기 브이로그'를 선보이며 화제가 된 이들이 있다. 홍보담당관실 김성래 주무관과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김명혜 주무관을 소개한다.

김명혜 주무관



Play

김명혜 주무관은 입사 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반부패 기관이라는 점에 특히 관심이 갔다고 한다. 권익위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권익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실제 업무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살폈다. 첫 발령지인 권익위 청렴연수원은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 사회구성원을 위해 청렴교육을 하는 곳이다. 교육과정은 청렴윤리경영담당자 과정, 사업유형별 과정, 고위직 과정 등이며, 공직유관단체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도 한다. 이곳에서 김명혜 주무관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초반이라 개선할 부분들도 있지만, 올해 예정된 42회 교육을 진행하면서 개선사항을 파악하면서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주변에 적극 추천하겠다'는 의견을 남겨주는 소소한 피드백에 보람을 느낀다는 김명혜 주무관. 교육생 민원 응대 후 감

사 인사가 담긴 메일을 받았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도 그의 목표는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여 어느 순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겨우 공직생활의 출발선에 선 신입이지만, 언젠가는 모두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김명혜 주무관의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응원한다.

국민생각함 활용 국민의견 조사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누구나 자유롭게 행정과 제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

생활이 개선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그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국민 목소리를 녹여낸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추진배경

구직활동 시 사업주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로 경제적 부담과 구직기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용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생각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과 정책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담되는 채용 신체검사,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없나요?

기간 : 2021. 6. 7. ~ 2021. 6. 20. / 794명

구직 활동 중 채용 신체검사 경험

민간기업	67.3%
공공기관	44.0%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체

(민간기업) 구직자	73.0%
(공공기관) 구직자	75.0%

채용 신체검사 제도에 대한 인식도

문제 있다 71.7%

'문제 있다'고 답변한 이유

비용·시간 등의 부담	44.2%
사무직 등은 질병자도 업무 가능	27.7%
질병으로 고용제한 우려	27.4%

채용 검사비용 부담 책임 의견

채용 신체검사 제도에 '문제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에게 질문

채용기관	79.8%
------	-------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찬성	90.4%
----	-------

주요 개선내용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 신체검사 비용에 대해 사용자 부담을 의무화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소속기관별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반영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교육 및 전파한다.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에 반영

기관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퇴직일(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 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반영

※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 비공무원 근로자 채용에 과도하게 준용하여 채용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 행정기관 등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반영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채용업무 세칙 등 관련 사규」에 반영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해 건강검진 결과 활용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2년 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칭)를 제공한다.

※ 행정기관 등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반영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채용업무 세칙 등 관련 사규」에 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가칭] 시스템 마련

손실보상에서 배제?! 너무나 부당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15]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했음에도 손실보상에서 배제된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사례를 소개한다.



라떼의 전설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

'나 때'로 시작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선 악습을 되풀이하는 방아쇠가 된다. 하지만 그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청렴했던,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나 때'라면 다르다. 청렴의 경험은 전설이 되어 먼 훗날에도 귀감으로 자리하게 될 테니.

WRITE

석낙완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필 분야 우수상

○○

내가 경험한 일들은 '라떼의 전설'이 되어야 한다.

진정 철 지난 전설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을 통해 더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가 멋지게 펼쳐지기를 마음껏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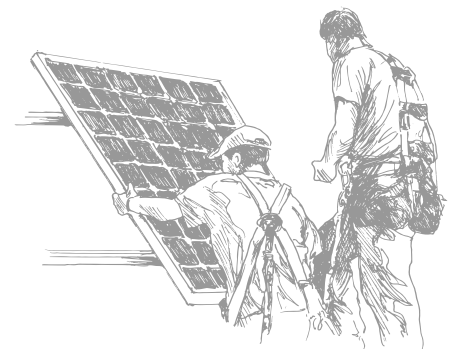
한 중년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끌려온다. “너 여기에 앉아” 형사가 말한다. 남자는 화난 표정으로 “너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라”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앉아 마” 형사가 남자의 뒤통수를 때린다. 이때 그 남자는 갑자기 수갑을 찬 손으로 신참 형사의 뺨을 힘껏 후려치며 “느그 서장 어딴어? 강서장 대꼬와야... 내 누군지 아냐? 으이~! 내가 이새까, 느그 서장이랑 임마야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인마, 어저께도 같이 밥 묵고, 으! 싸우나도 같이 가고, 마아, 개이새까 마 다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개새끼이들”

이 대사는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영화의 한 부분이다.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비리, 유착, 갑질, 양심, 양심, 정의, 청렴과 같은 낱말들 말이다. 공직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는 너무 이른 시기에 위에서 열거한 단어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군복을 입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았다. 상담원이 물었다. “어느 직렬의 공무원을 준비하세요.” “네! 건축직 공무원인데요.” “아! 그래요”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상담을 마치고 문을 막 나서는데 아저씨 한 분이 큰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건축직 공무원 좋지! 권한도 크고 생기는 것도 많고” 하면서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난 그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저 미소만 짓고 나왔다. 그런데 그 말뜻을 이해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꼬박 일 년 반을 공부한 끝에 시험에 합격했다. 내가 발령받은 지역은 소문난 달동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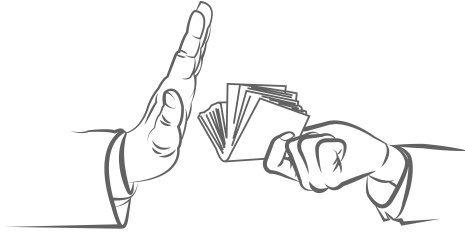
나의 업무는 소규모 건축신고와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불법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출장해보니 오십 대 중년 남자가 인부들과 함께 옥상에서 불법으로 주택을 증축하고 있었다. “저는 동사무소 건축 담당입니다.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건축 담당이구먼! 안녕하쇼! 나 김○○ 사장이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새로 발령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나의 경고에도 너무나 여유 있게 인사를 건네는 그가 참으로 의아했다. 내가 재차 경고하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알았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나는 철거가 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이윽고 나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다. 뜻밖에도 계장님이었다. 그만하면 됐으니 들어오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야근하고 있는데 계장님이 동사무소 아래 고깃집으로 나를 불렀다. 그 자리에는 얼마 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장에서 만난 그 사장이 있었다. “여기 앉아. 이 사장님 알지? 지난번 일로 미안하다고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난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상급자의 지시라 거절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 현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무허가는 반듯하게 건축되어 주택으로 이용 중이었다.

난 순간 고민했다. 다시 단속할까?
그런데 그 건축업자와 저녁 식사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내가 한없이 부끄럽고 비굴해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내가 단속하면 계장님이나 몇몇 선임자들이 나를 불러 회유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했다.



현장에서 공사업자가 현금 봉투를 내민 적도 있었고, 직원들을 통해 전달하려 했으며, 심지어 책상 서랍에 돈 봉투를 놓고 간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난 절대로 굽히지 않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철거하기도 했고, 거리에서 몸싸움도 불사했다. 어느덧 나는 동네에서 보안관으로 소문이 났다. 그들은 나를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근무하던 동네는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구의원의 지역구였다. 그 의원은 특하면 나를 불러 훈계하곤 했다. 구의원은 위반 건축물이 크지도 않고 생계형인데 봐주라고 했다. 난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 “의원님, 지금 불법을 눈감아 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주민들의 표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이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의원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러면 곤란한데 다음에 보자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청 인사계장이 나에게 전화를 해왔다. “나 인사계장인데 당신 아직 시보라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곧으면 부러지는 법이야. 갈대처럼 유연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의원님을 많이 도와드리라고 협박성 당부를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구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구청장이 되었고, 인사계장은 곧바로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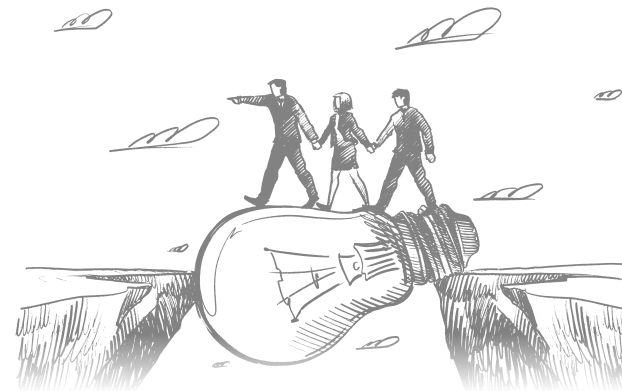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우리 동네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상가 여러 채가 헐렸다. 문제는 철거한 후 남은 부분이 거의 무허가 건물이었다. 건축주들은 건물 일부를 살리기 위해 불법으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나는 공사 중단 명령을 했다.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를 압박했다. 결국 민원이 시 본청으로 들어갔고, 감사실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다. 감사관은 공무원이 불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혹시 돈을 받고 봐준 것이 아닌지 캐물었다. 난 억울하고 분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감사관에게 말했다. 그는 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소신껏 일하고 있는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감사관은 약속대로 나를 징계하지 않았다.
다만,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고발 등 처분지시만
했을 뿐이었다. 나의 진심을 믿어주고 당당한
공무원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주신 고마운 분이다.

나는 여전히 24년째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때는 왜 청렴해야 하는지 몰랐다. 다만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청렴은 공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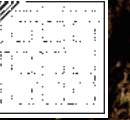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어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토대는 법과 제도이며 이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당당한 공무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팀원들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다. 팀원들은 놀라워하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내가 경험한 일들은 ‘라떼의 전설’이 되어야 한다. 진정 철 지난 전설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을 통해 더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가 멋지게 펼쳐지기를 마음껏 기대해 본다.



변산반도 빛 여행

억겁의 서사가 만든 자연의 윤곽에는 날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담겨있다.
그래서 변산반도에 웅튼 모든 것은 빛나고 어둡고 낡고 투박한 표정을 지녔다.
문명의 소란과 소음이 달지 않은 이곳에서 우리의 시곱바늘은 잠시 과거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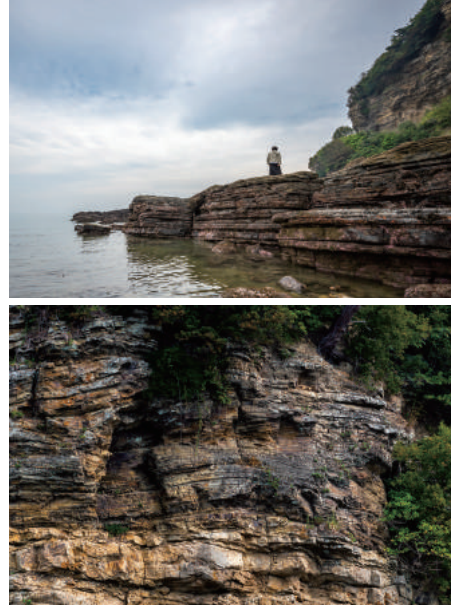
글 김성호 사진 최준근



세번째 나들이

먹으로 빛은 역작
빛으로 새긴 명작

바다와 하늘의 푸름 사이로 돌출하는
채석강의 자태는 웅장하다.
거대한 퇴적암석이 산처럼 우뚝하게
바다 한편을 가득 메운다.
7천만 년의 퇴적과 풍랑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산물이 바로 채석강이다.
아침 시간, 물때에 맞춰 찾아간
채석강은 윤곽만을 그린 그림자처럼
묵묵하다. 검은 암반이 바지런하게
바다 끝과 맞닿아 있고, 때 묻고
오염된 활자 더미들이 쌓여 있는 듯
신비롭다. 마치 시간이 썩 내려간
수만 권의 고서가 차곡차곡 포개진
모습이다.



물이 완전히 빠지고 빛이 들기
시작한다. 해안을 빙 두른 검은
암반은 담청색 쇠붙이처럼 은은하게
빛을 품는다. 해수면을 향해 조심스런
발걸음을 내디디면 암반에 고인
웅덩이에서 유영하는 어류도 마주할
수 있다. 물이 완전히 빠지는 저조
시간이 되자 빛이 돌던 암반은 금세
건조한 거북이 등껍질처럼 사각하게
마른다. 채석강을 둘러보는 탐방로는
길이라고 하기엔 조금 위태롭다.
패총이 빼곡하게 박힌 암반 사이에
해초가 엉켜있고, 무릎과 허리 높이의
암석들은 기이한 자태로 뒤섞여있다.
멀리서 보면 우직한 바위명석을
갈아놓은 것 같지만, 발끝에 절로
힘이 들어갈 만큼 비탈지고 요란하다.

억겁을 견뎌온 채석강이지만,
채석강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해식동굴의 신비로운
풍광 때문이기도 하다.
물이 완전히 빠지는 시간이 되면
채석강의 부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거대한 암석에 부리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바람과 파도에 의해
침식돼 만들어진 해식동굴이
뿌리처럼 내려앉아 채석강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식동굴 안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풍광은 눈부시다.
검게 뒤튼린 암석의 틈 속에
서해의 아름다움이 넘칠 듯 담긴다.
먹색 종이 위에 푸른 물감이 풀린 듯
채석강의 먹과 서해의 빛이 만드는
절경은 호사스럽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 적벽강으로 향한다.
 격포 해수욕장의 백사장을 따라 북쪽으로 걷다 보면
 붉은 벽으로 이루어진 적벽강을 마주할 수 있다.
 중국의 적벽강만큼 경치가 뛰어나 붙여진 이름이다.
 북쪽으로 돌아가면 2개의 절벽으로 된 바위가 있는데,
 그 안에 용굴이라 부르는 해식동굴이 자리한다.
 용굴과 함께 형형색색의 수석이 만들어내는
 절경은 적벽강을 향하는 이유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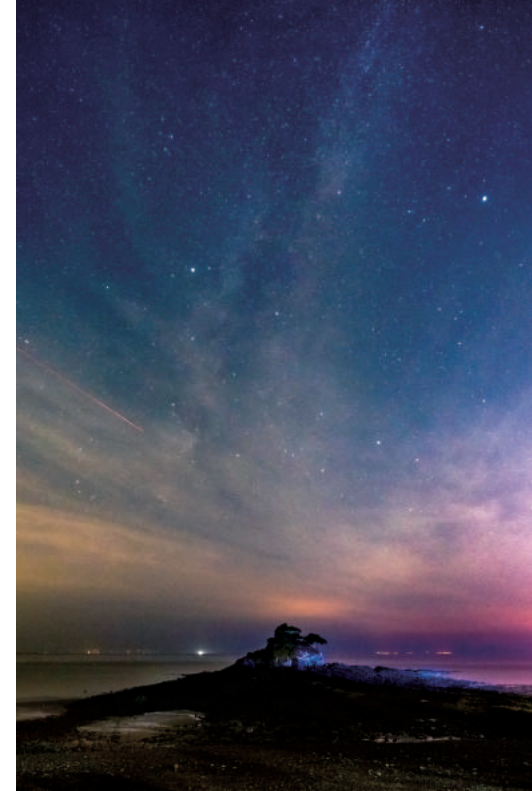
변산반도의 해변을 따라 약 2km 길게 이어진 적벽강은
 빼어난 석양 풍경으로 이름난 곳이다.
 오후 6시, 수평선 너머로 진홍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석양의 모서리가 적벽강의 윤곽 뒤에 모습을 드러낸다.
 해변에 등성등성 발불인 암반 표면 위로 빛이 스미고 바위의 질감이 덩달아 부풀어 오른다.
 한 뼘 거리에 풀어진 파도는 포말과 함께 애잔하게 흠뻑하며 빛을 섞는다.
 앞뒤로 움직이는 파도와 위에서 아래로 깊어지는 빛의 조합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불을 붙인 듯 적벽강의 사위가 붉은빛으로 일렁인다.
 10분, 석양이 온전히 바다 너머로 자취를 감추는 시간이다.
 어둠은 겹겹의 식물처럼 촘촘하고, 단단하게 내려앉아
 적벽강의 웅장한 윤곽만을 남겨 놓는다. 늦가을, 변산반도의 어둠은 생각보다 빨랐다.



변산반도의 빛은 아침에서 밤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진다.
 어둠이 내려앉은 적벽강을 뒤로하고
 별을 보기 위해 솔섬을 찾는다.
 솔섬에 가까워지자 자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스친다. 적막 속에도
 특유의 물소리가 깊게 메아리친다.

변산반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솔섬은
 외로운 바위섬이다. 물이 빠지면 길이 열려
 걸어갈 수 있지만, 가까이 마주하는 것보다
 멀리서 바라보는 솔섬이 더 매력적이다.
 등성등성 부리 내린 해송의 여린 실루엣이
 깃발처럼 외딴섬의 존재를 각인시킨다.
 석양 명소로 이름나기 시작한 솔섬이지만
 별을 눈을 담기 위해 찾는 이도 적지
 않다. 날이 좋고, 때가 맞으면 솔섬 뒤로
 무리 지어 늘어지는 은하수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밀물에도 솔섬의 풍광을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데크 전망대도 설치했다.

작은 별이 바위에 박힌 패총처럼
 변산반도의 밤하늘을 촘촘하게 메운다.
 변산반도가 하루 동안 품을 수 있는 빛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늦은 밤 솔섬에서
 마주한 자연은 여전히 보여줄 게
 남은 듯 작은 별들로 여행자의 노고를
 반긴다. 그렇게 빛을 따라나선
 변산반도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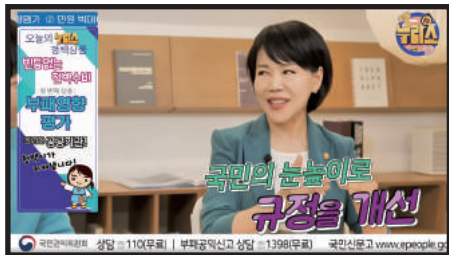
변산반도의 하루는 길다.
 시간을 확인하며 걸음을 재촉하던
 도시의 일상과는 달랐다. 모든 것은
 느리고, 깊었으며 때론 낮았다.
 변산반도가 건넌 자연의 표정은
 오랜 시간 여행자의 기억에 남아
 언제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
 빛의 기억으로 남을 레다.

#첫 번째 상품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평가제도이자, 법률이나 행정명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부패통제 시스템입니다.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
4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발 빠른 행정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아요!



관련영상보기

LIVE

지구 최강
정책을
판매합니다

국민권익 다함께 누리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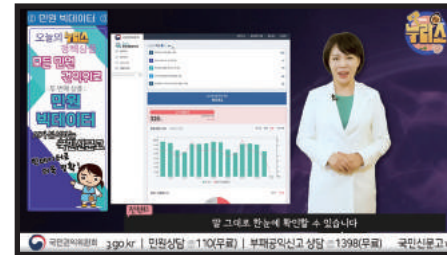
국민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드리는
국민을 위한 지구 최강
정책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상품

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등에 모인
국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전에 예고하는 ‘민원 예보’를
도입했는데요. 최근 급등하는
국민의 불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

제도 개선

국민 신문고에 제기된 수많은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방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Clear! ‘제도 개선’ 대표 사례

[반값 수수료 제도 개선]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편
사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절반
이상 낮췄어요!



**소수의견**

감독 김성제

출 연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등
장 르 드라마
줄거리 2년 차 국선변호사 윤진원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 윤진원은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과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의 움직임으로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한다.

Point 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청렴 VS 부패

부패와의 전쟁

**모비딕**

감독 박인제

출 연 황정민, 진구, 김민희 등
장 르 드라마
줄거리 1994년 11월 20일 서울 근교 발암교에서 일어난 의문의 폭발 사건. 사건을 추적하던 기자 이방우 앞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향 후배 윤혁이 나타난다. 그는 이방우에게 일련의 자료들을 건네며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을 암시한다. 이방우는 동료들과 특별취재팀을 꾸리지만, 취재를 방해하는 의문의 일당들로 인해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Point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은 그림자**악질경찰**

감독 이정범

출 연 이선균, 전소니, 박해준 등
장 르 드라마
줄거리 뒷돈은 챙기고, 비리는 눈감고, 범죄는 사주하는 악질경찰 조필호는 경찰 압수창고를 털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조필호의 사주를 받아 창고에 들어간 한기철이 의문의 폭발사고로 죽게 되고, 필호는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해 사건을 쫓던 중, 폭발사건의 증거를 가진 고등학생 미나와 엮이게 되고 거대한 음모와 마주한다.

Point 더 나쁜 놈을 잡는 나쁜 경찰 이야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누구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부정을 저지르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청렴을 선택한다. 하지만 부패는 한 번 뿌리 내리면 건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 부패의 유혹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청렴을 지키는 영화 감상을 통해 오늘도 부패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둬보자.

**1급 기밀**

감독 홍기선

출 연 김상경, 김옥빈, 최무성 등
장 르 범죄, 드라마
줄거리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에게 어느 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 대위가 찾아와 전투기 부품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익이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유독 미국의 에어스타 부품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되고 폭로를 결심한다.

Point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한 공익신고자

미술품 투자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글 홍성용 매일경제 기자

미술품을 이용한 신종 재테크

지금까지 미술품 투자를 향한 단상은 소수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투자할 수 있는 거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작품을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를 때까지 소장하기 위해 마땅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술 작품을 구매하기 위한 문턱이 대거 낮아졌다. SNS에서는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과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고가의 미술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도 생겼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에 풀린 자금들이 투자할만한 곳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처로서 미술품 투자가 주목을 받게 됐다. 그 결과 미술품을 이용한 신종 재테크라는 의미로,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는 말도 생겨났다.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처럼 대중적인 투자로 발돋움한 것이다.

MZ세대가 주도하는 아트테크,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최근 아트테크의 양상은 M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MZ세대를 미술품 구매에 뛰어들게 한 가장 큰 유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유인으로는 국내외 현대미술 거장들의 고가 미술 작품 한 점을 수천 개의 소유권으로 쪼개 투자하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소유권을 분할해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의 투자자가 나눠서 구매하고, 이후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운용한다. 대표적인 플랫폼 '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글로벌 200위 내의 블루칩 아티스트 작품을 조각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각투자 최소금액은 1,000원 수준이다. 이 플랫폼은 올해 6월 기준 누적회원수만 12만 6,000명을 넘었다. 더욱이 미술품 투자는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세금이 덜하다는 게 MZ세대의 구미를 당긴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과 달리 세금이 덜하다. 미술품을 양도(매도)할 때 양도세만 내면 되고, 미술품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0'원이다.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사고 팔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미술품 구매, 어디로 가야하나

통상 미술품은 갤러리(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등에서 유통된다. 이 중 최근 관심이 몰리는 곳은 아트페어다. 올해 4월에 열렸던 제11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에서는 MZ세대 컬렉터들이 몰리면서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고,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10만 명의 방문객을 맞았다. 사흘간의 전시 기간에 판매된 작품 총액만 250억 원 수준이다. 좀 더 쉽게 미술품을 만나는 방법은 백화점에 가는 것이다. 최근 롯데·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매장에서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린 갤러리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부터 본점, 잠실점, 동탄점, 광주점 등 6개 점포에서 미술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억 원대의 유명 작가 작품부터 20만~30만 원대의 신진 작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3층을 '아트스페이스'로 이름 짓고 갤러리 공간으로 전면 재단장했다. 3층 명품 매장의 통로, 벽, 라운지를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 100여 점이

이곳 매장에 상설 전시되고 판매된다. 전체 작품의 순환주기는 한 달 정도다. 주식이나 코인 시장의 널뛰기에 가슴앓이 해왔다면, 새로운 투자처로 미술품은 어떨까. 다만 좋은 작품을 고르는 눈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좋은 작품이 담금질하는 동안 함께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은 필수다.



알레르기비염이제 그만

‘예취!’

가을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다.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로
알레르기비염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이러다 말겠지’하며 넘기지 말고
알레르기비염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예방해보자.



**알레르기비염,
감기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알레르기비염은 코막힘, 콧물 등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하나 엄연히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항
원에 노출되었을 때 생긴다는 점이다. 알
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은 집먼지진
드기, 동물 털, 꽃가루 등 여러 가지 요인
이 있으며 개인마다 반응하는 항원도 다르
다. 증상 역시 차이가 난다. 알레르기비염
은 아침, 저녁에만 증상이 심해지며 눈과
코의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TIP 1

알레르기비염, 생활에서 예방하는 방법



금연하기

흡연하면 각종 유해 화학물
질에 자극받아 비강 점막이
붓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진료받기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 방법
으로 꾸준히 관리하여 합병증
을 예방한다.



손 씻기

세균성 감염을 막기 위해 물
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
어준다.



마스크 착용하기

황사가 심하거나 꽃가루가
날리는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한다.



청소하기

실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씩
55℃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온도·습도 조절하기

급격한 온도 변화는 비염
을 악화시킨다. 실내 온도는
20~22℃, 습도는 50~60%로
유지해준다.

TIP 2

알레르기비염을 완화해주는 음식



생강

생강은 기침이나 가래 등을 멎
게 하는 효과가 있다. 꾸준히
끓여 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예
방할 수 있다.



작두콩

작두콩에는 일반 콩보다 비타
민A, C가 풍부해 섭취 시, 면역
력을 높여준다. 수세미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더 크다.



홍삼

홍삼에는 면역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사포닌 성분의 일종
인 '진세노사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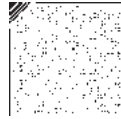


녹황색 채소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
여준다. 특히 미나리는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해 몸속 노페
물 배출을 돕는다.

다시 읽는 권익

정의의 터를 다지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p 8-13

규제혁신

규제혁신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은 억제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기업의 가치는 높아진다.

p 14-17

CHANGE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됐다.

p 24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의 종류나 처리기관과
상관없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민원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다.

p 28



부패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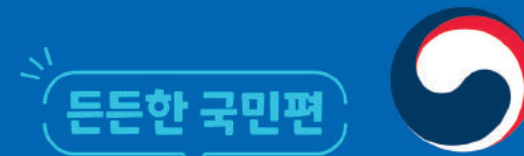
‘부패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평가체도로, 법률이나 행정명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부패통제 시스템이다.

p 50-51

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국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민원 예보' 도입으로
최근 급등하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분석·예방하고 있다.

p 50-51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 '한 곳에서 한 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손잡아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나요!

1 방문 상담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외교부건물)
※ 입구: (외교부쪽) **외교부건물** - 본관 구름다리 아래

② 온라인 상담

민원



www.counseling.go.kr

부패·공익
신고



www.clean.go.kr

③ 전화 상담

민원 국민콜

☎ 110 (무료)
365일 24시간

부패·공익신고

 **1398** (무료)
평일 09:00~18:00



폴 칠 하는 곳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국민권익

2022 AUTUMN VOL.74

받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AUTUMN

ACRC NEWSLETTER 2022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vol.74



연락처 :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국민권익>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국민권익>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2022년 가을호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 ● ● ●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게시판 : 뉴스·소식 → 홍보자료 → 국민권익소식지